

研究論文

# 한국 사회 이주노동을 둘러싼 담론 분석\*

김 원\*\*

I. 서론 문제제기와 연구 목적	III. 소결
II. 이주노동을 둘러싼 담론들	

## I. 서론: 문제제기와 연구 목적

이 글은 세계화 이후 한국 사회 임금 노동자의 2%에 가까운 35 만 명을 차지하게 된 이주노동을 둘러싼 한국 사회 내부의 시각을 ‘담론’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주노동을 둘러싼 노동조건, 인권 탄압, 법·제도적인 취약점 등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1) 실태조사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 이 글은 『세계화·정보화시대 국가·시민사회와 한민족의 위상』,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국제학술회의(2005년 3월 25일,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원고이다. 국제학술회의 때 유용한 코멘트를 해주시고 자료를 정리해둔 홈페이지(www.dhseol.com)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전북대 설동훈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초기 연구 과정에서 『아시아 아시아』 등 매체 분석을 제안해주신 전제성 박사님, 유용한 연구 자료를 제공해주신 서강대 대학원 이정혁님께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정치학 전공

1) 이주노동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 사회적 자본, 연결망 등에 기초해서 이주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박경태 「노동력 송출국에서 본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연결망: 필리핀 가족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신학사상』, 2001년 여름호(2001) 등의 연구가 있다. 문화·사회적 관점에서 일상적 차별의 원인을 다룬 연구로는 이옥정 「국내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생활실태와 적응 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대 인류학과 대학원 석

이주노동자에 대한 여론은 점차 온정주의적으로 변해왔다. 또한 2003년 7월 31일 국회에서 고용허가제 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1990년대 이후 이주노동자운동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였던 ‘근로자로서 지위 인정 투쟁이 종결되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국가의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산업연수생제도의 ‘재판’이란 비판도 엄연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독일 등 서유럽 국가에서 드러나는 노골적인 인종주의 내지 폭력 등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자살 및 인권 탄압 등은 대부분 ‘사건화’될 뿐이다. 대부분 이주노동자 문제는 신문 지상에 발표될 때만 거품처럼 일어나 사회적 반향(反響)을 불러일으키지만,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 채 다시 잊혀져 간다. 이러한 원인은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일관된 침묵의 카르텔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조직화된 언어’의 형태인 담론을 통해 관철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주노동을 둘러싼 제도·법적인 조건 및 상황에 대해 치밀한 연구를 진행했던 선행 연구들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을 둘러싼 조직된 언어인 담론들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 이주노동을 둘러싼 담론들이 어떠한 논리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타자화’ 혹은 ‘소수자화’시키는지 탐구해보고자 한다.<sup>2)</sup>

특히 이 글에서 주목하는 점은 다수 한국인들은 이주노동자들을 먼 대면(face-to-face)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오히려 대다수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직된 사고의 틀은 대부분 언론·방송, 사회화된 이슈의제 등을 통해 형성된 ‘상상된 관념’으로서 이주노동자이다.<sup>3)</sup> 바로 이주

사논문(1994); 유명기, 「제한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27집(1995) 등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종주의를 분석한 함한희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따른 인종과 계급문제」, 『한국문화인류학』, 제28집(1995)과 박노자, 『당신들의 대한민국』(한겨레신문사, 2001)도 있다

2)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국적 및 인종에 따라 상이하며, 각 국가별로 문화적 정체성도 차별적이다. 이 글에서는 차별적인 이들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한국으로 노동이주를 선택한 다양한 이주노동자들이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한국 사회의 담론에 의해 주변부 노동자 사회적 타자로 ‘수렴’(convergence)된다는 맥락에서 통칭해서 ‘이주노동’이라고 지칭했다. 함한희, 위의 논문, 209쪽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에 대한 상(像)을 만든 특정한 담론을 통해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상세한 노동조건, 인권 유린, 제도적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주노동에 대한 지배적인 시각을 형성한 담론들이 지닌 논리적인 모순을 드러냄으로써 지배적 담론이 지닌 한계를 모색할 것이다.

이 글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이주노동을 둘러싼 지배적 담론은 희생양·피해자로서 이주노동, 수혜 대상으로 이주노동 그리고 사회적 차별의 대상으로 이주노동이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분석 자료는 이주노동자들의 수기·보고서, 이주노동을 사건으로 다룬 언론 매체의 보도, 이주 노동자지원 단체의 실태 보고서 그리고 언론·방송매체에서 이주노동을 다룬 보도물 등이다.<sup>4)</sup> 구체적으로 II장 담론 분석에서는 1)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인의 시각이 드러난 자료들을 통해 이주노동을 희생양으로 보는 시각, 2) 방송매체에서 드러난 이주노동을 보호·수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 3) 작업장 일상생활 공간 속에서 이주노동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시각 등을 차례로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III장에서는 이러한 이주노동을 둘러싼 지배적 담론이 지닌 한계를 분석할 것이다.

## II. 이주노동을 둘러싼 담론들

이주노동자들은 ‘현대판 노예제’라고 은유될 정도로 열악한 노동조건, 인권의

3) 설동훈, 『국내 외국인노동자 차별해소방안 연구』(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4), 55 쪽

4) 이 글에서는 이주노동자운동 운동 주체의 담론이나 운동방식을 둘러싼 평가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을 것이다. 1995년 명동성당 농성 이후 만들어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운동사적 의미, 이주노동 지원단체 그리고 평등노조 이주본부의 이주노동자 운동주체, 운동의 방식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 2003년 자진신고 기간 시 방침 명동성당 농성을 둘러싼 조직적 분리 등은 현재도 첨예한 ‘논쟁’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이주노동운동사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주노동운동에 대한 평가로는 설동훈, 『한국의 외국인노동자운동, 1993~2004년』,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한울, 2004); 설동훈, 『한국의 외국인 노동운동, 1993~2003년』, 『진보평론』 17호(2004); 설동훈, 『한국의 이주노동자 운동』, 『우리시대의 소수자운동』(이학사, 2005); 케빈 그레이,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서 한국의 이주노동자들』, 『아세아연구』, 제47권 2호(2004) 등을 참조

사각지대, 노동권의 박탈 등을 경험해왔다. 특히 몇 차례에 걸친 이주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저항, 1990년대 중반 이후 이주노동자 문제가 사회화된 이후 언론의 ‘사건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주노동을 둘러싼 조건이 변화한 결과, 한국 사회 이주노동에 대한 온정주의적 시각이 형성되었으며,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를 중심으로 한 NGO와 종교 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법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주노동을 둘러싼 담론은 이주노동을 특정한 방식—이 글에서 희생양, 보호의 대상, 차별의 대상으로 본—으로 주체화시키기 위한 논리들이 숨겨져 있다.

### 1. 불쌍한 것들: 희생양·피해자로서 이주노동

이주노동자들의 내·외적 조건을 보면 산업화 시기 한국 노동자—특히 여성노동자—들이 떠오른다. 가족의 생계를 위한 이주노동, 임금의 송출(送出), 저임금과 남녀간 임금 차별, 산업재해, 노동3권의 박탈, 자의적인 해고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산업화 시기 한국 사회는 ‘조국 근대화(祖國近代化)’라는 국가 지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미숙련·농촌 출신 노동력을 광범위하게 동원했다.

특히 가난한 농촌에서 가족의 생계와 장자(長子)의 교육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여성이라는 담론은 산업화의 부정적 폐해를 강조하는 측에서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이들은 여성노동자들의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작업장에서 폭력, 산업재해 등의 현실을 강조하면서, 여성노동자들을 산업화의 ‘희생양’으로 위치시켰다.<sup>5)</sup> 산업화 시기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담론과 유사하게, 세계화 시기 이주노동에 대해서도 ‘희생양’ 담론이 덧씌워 졌다.

이주노동자들도 가난한 나라의 최하층 ‘불쌍한 인간군’으로 간주되면서, ‘잘사는 나라’ 한국과 대비된 이주노동자 모국의 열악한 현실, 빈곤, 가난이 지속적으로 강조된다. 한마디로 이주노동자 출신국가의 세계체제 내에서 ‘주변부’적인 성격이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되면서, 이주노동자들은 주변부 국가와 가족의 빈곤을 위해 희생되고 있는 존재로 간주된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고통 받는

5) 김원, 「여공담론의 남성주의 비판: 전전 일본 여공에 비추어 본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2003), 70-96 쪽

것 가운데 한 가지는 그들을 ‘가난한 나라에서 굶주림을 피해온 난민’(難民, refugee)으로 보는 담론이다<sup>6)</sup> 말리 출신의 미등록노동자는 “한국 사람들은 까만 사람 싫어해요. 가난해서 한국에 왔다고 싫어해요. 한국 TV에 보면 옛날 아프리카 사람들 사는 모습만 나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에이즈에 걸렸거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한다.<sup>7)</sup> 20대 젊은 조선족 여성 노동자가 한국인 매점 주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이런 시각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어 준다.<sup>8)</sup>

너저들 못하는데 있다가 한국 오니까 정말 좋제? 중국에서 살라믄 얼마나 답답했겠노..너저는 운이 좋은 편이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 너저 불쌍하다고 하나라도 잘해줄라고 하지 해꼬지할라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너저도 애먹이지 말고 살해야 한다.

주현숙의 다큐멘터리 『계속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기록된다』(2004)를 보더라도, 한국인들이 이주노동자들을 거지처럼 생각하며, 심지어는 “니네 나라에 TV 있어? 달(moon)은 몇 개 있어?”라고 물을 때면 한국 사람들은 바보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인터뷰가 등장할 정도이다. 이런 방식으로 생산된 담론들 안에는 이주노동자들을 ‘부유한 한국에 와서 그나마 운이 좋다’ 혹은 ‘가난 열등·미개 하다고 사고하는 논리가 내재되어 있다. 다소 단순화시키자면 ‘좋은 한국(내부)와’ 위험한 외부’를 분리시키며, 외부자(가난한 주변부 국가 혹은 사회주의 중국)를 한국 사회 내부의 ‘타자’로 위치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인종적 위계질서와 연관된 담론과 함께 반드시 따라다니는 말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자찬’(自讚)이다. 이주노동에 대한 온정주의적 시선에 감추어진 것은 주변부 국가에서 희생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도 ‘열심히 근면하게 일한다면 한국처럼 반주변부 혹은 중심부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각이다. 이러

6) 한건수, 「‘타자만들기’: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재현」, 『비교문화연구』, 제9집 2호(2004), 167쪽

7) 심지어 25세 중국 산업연수생의 경우, 물건을 살 때 상인들이 이런 건 비싸서 [가난한 중국인들은 인용자주 못산다고 동정하기도 했다고,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설동훈·최홍엽·한건수,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02), 181, 264쪽

8) 유명기, 「외국인 노동자, 아직 미완성인 우리의 미래」, 『당대비평』, 18호(2002), 20쪽

한 시각은 1960년대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었던 ‘근대화 이론’(modernization theory)의 가정을 답습하는 동시에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에 숨겨진 모순을 은폐하고 있다.<sup>9)</sup>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60~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동아시아 노동자들에 대한 이미지는 ‘유순한 노동력’ 혹은 ‘순박한 농촌 처녀’와 같은 오리엔탈리즘에 기반했던 것이었다. 이는 주변부 국가가 다국적 자본의 초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국 노동력의 성격을 스스로 규정한 것이었다. 바로 다국적 자본의 초과 착취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이미지가 유순한 노동력으로서 아시아 노동자였다.<sup>10)</sup>

유사한 맥락에서 이주노동에 대해 희생양이란 이미지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담론으로 제시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역전된 오리엔탈리즘’이다. 단적인 예가 한국인 고용주와 노동자들이 군말 없이 순종적인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을 보고, “미개 사회에서 와서 그런 지 순진하다”라는 이야기이다.<sup>11)</sup> 이처럼 열등하고 무력한 존재로 이주노동자를 규정하는 담론은 한국 사회 내 이주노동자의 ‘주변계급’(under-class)으로 속성을 더욱 강화할 뿐이다.<sup>12)</sup>

결국 이주노동자를 가난한 주변부 국가의 ‘불쌍한 인종’으로 보는 담론은 이주노동자들을 피해자·희생양으로 정당화하고, 한국 사회의 ‘타자·소수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다양한 경제적 목적에서 자신의 의지로 국경을 넘은 개인과 집단이다. 이들에게 ‘국제노동이주’라는 선택은 능동적 행위였다.<sup>13)</sup> 입국 비자에서 송출금 마련 그리고 낮은 기후와 언어, 배타적인 문화 등을 극복하고 이주노동자로서 경험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이들의 선택은 결코 주변부 인종의 희생으로 폄하될 수 없다.<sup>14)</sup>

9) 한국에서 근대화 이론의 수용에 대해서는 박태균, 「로스토크우 제3세계 근대화론과 한국」, 『역사비평』, 2004년 봄호(2004), 136~166쪽 참조

10) 김현미,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의 노동권」, 『한국여성학』, 제16집(2000).

11) 유명기, 앞의 논문(1995), 161쪽

12) 케빈 그레이, 앞의 논문, 98쪽

13) 한건수, 앞의 논문, 186쪽

14) 그러나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여전히 남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첫 번째, 이주노동에 따른 ‘가족 해체’ 문제다. 보고에 따르면 이주노동이 이혼,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적 유대감만을 형성한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적되고 있다. 두 번째,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서 이주노동이 만족스러운 결과보다 ‘이주노동의 악순환’으로 귀결되는 경우이다. 세 번째로, 이주노동의 ‘여성화’라는 문제가

## 2. 수혜의 대상으로 이주노동

몇 차례에 걸친 이주노동자들의 농성 그리고 아모르 노동자들의 파업 등은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담론을 변화시켰다. 신문 지상 및 언론 매체에 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실태 등을 특집 기사와 다큐멘터리로 보도했고, 여론 조사에서도 이주노동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들이 다수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언론 매체들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도는 ‘사건·문제’ 중심이라는 것이다. ‘무너진 코리안 드림’이라든지 ‘악덕 고용주의 임금체불로 무일푼이 된 사례’ 등과 열악한 인권상황과 노동조건이 보도의 배경으로 반복적으로 다루어짐으로써 이주 노동자를 일상에서 본 기회가 없는 한국인들에게 이들은 ‘천한 직업에 종사하는 동정과 수혜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박노자도 중국이나 러시아 교포들의 상황을 직접 대할 기회가 없는 한국인들이 거의 유일하게 접할 수 있는 보수언론이 보여주는 북방 지역 교포에 대한 모습을 “한국의 각종 단체(교회, 병원, 기업)가 어려운 교포들에게 베풀어준 각종 ‘시혜(선교와 교육 활동, 의료 봉사, 경제 지원)와 ‘수혜자’들의 열렬한 반응에 대한 보도들은 재러·재중 교포 관련 신문·방송 보도의 대다수를 차지...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문명화·현대화할 수 있는 ‘우리의 종교, 우리의 의료, 우리의 산업’의 현지 확장이라는 것이 모든 북방 교포 관련 보도의 보이지 않는 심층적 의식이다. 한마디로 적극적이고 선진적인 ‘우리’와 소극적이고 후진적인 ‘그들’이 대조된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sup>15)</sup> 나는 이를 이주노동에 대한 ‘온정주의 시선’이라고 부르고 싶다.

물론 온정주의적 시선의 형성이 모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는 초기 이주

---

다. 초기 이주노동은 남성 중심적인 경향에서 점차 여성화 되고 있다 그 결과 이주여성의 매매 출 여성화, 국제결혼을 통한 이중 착취 구조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세계화가 일국 내 여성의 비정규직화·빈곤화만이 아닌, 이주여성에게도 확대 재생산됨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문헌으로는 설동훈·김현미·한건수·고현웅·셀리아,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여성부, 2003); 설동훈·김현미·한건수·고현웅·셀리아, 『외국인 여성엔터테인먼트의 일과 삶』(한국사회학회, 2003); 최진영, 「국내 거주 이주여성의 삶 들여다보기, 내가보기」(미발표 논문) 등을 참조

15) 박노자, 앞의 책, 71~72쪽.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진일보’(進一步)한 형태임에 틀림없다. 이런 시각 변화에는 누구도 이주노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선도적으로 이주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많은 단체와 활동가들의 노력들이 배어있다. 하지만 여전히 온정주의의 시선이 이주노동자들을 ‘독립적인 주체’ 혹은 ‘동등한 권리를 지닌 노동자’로 파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가해진 각종 인권 침해를 ‘고발’(告發, accusation)함에도 불구하고 온정주의의 시각은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해서 다시 고향으로 귀환시켜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담론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온정주의의 시각을 드러내는 담론을 생산하는 사례 가운데 하나가 박수홍·윤정수의 『아시아, 아시아』라는 프로그램이다.<sup>16)</sup>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형’(大兄)으로 불리며 데뷔한지 11년 만에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개그맨 윤정수(32)씨. 웃음을 선사하던 그는 MBC 인기프로그램 ‘느낌표의 ‘아시아, 아시아’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상봉을 주선하면서 진한 인간애와 감동의 전령사로 변신했다”고 신문에 소개될 정도로 사회적 파급력이 적지 않았다.<sup>17)</sup>

『아시아, 아시아』는 동남아시아와 각국 노동자들의 한국에서 경험 가족과의 이산(離散)으로 인한 고통, 한국에서 온정(溫情)을 베풀었던 ‘고마운 한국인’의 소개해주고 진행자들은 직접 이주노동자들의 본국을 찾아다니면서, 주변부 국가의 빈곤, 실업난 등을 보여준다. 진행자들은 천신만고 끝에 만난 이주노동자의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고통 받는 이주노동자와 극적인 ‘상봉’(相逢)이 연출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며, 빈곤과 역경을 딛고 발전한 ‘대한민국’의 모습이야말로 이주노동자와 가족들이 만들어 나아가야 할 꿈이자 미래임이 ‘자막’과 함께 강조된다.

여기까지가 2004년 3월부터 반년에 걸쳐 방송되어 언론 및 한국 사회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 『아시아, 아시아』의 대강의 줄거리이다. 매회 등장하는 주인공인 이주노동자와 진행자들이 찾아가는 이주노동자의 본국이 바뀔 뿐,

16) 이 부분은 다른 연구(한건수, 앞의 논문, 182~183쪽)에서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자세한 텍스트 분석이 결여되어 본 연구는 방송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다시 분석했음을 밝힌다.

17) 김연희, 「외국인 노동자와 눈물 함께 나눠 행복, 윤정수씨」, 《문화일보》 2003년 5월 7일자



기본적인 방송의 줄거리는 변화하지 않았다. 매 방송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 차별과 편견이 아닌 관용과 배려, 우리와 같이 존중받아야 할 이웃임을 확인하는 휴먼 프로젝트(Human Project)”라는 『아시아, 아시아』의 슬로건이 커다란 자막과 함께 반복되어 강조된다.

이러한 슬로건이 생산해내는 담론은 IMF 경제위기와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 낸 한국이 이제 아시아 주변국들에 대해 시선을 돌려, 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아시아, 아시아』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이주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데 어느 학술 논문이나 보고서보다 큰 역할을 했고, 그 결과 PD 연합회의 ‘실험정신상’, 백상 예술대상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다소 과도한 비판일지도 모르지만, 감동, 휴머니즘이라는 이 프로그램의 이면에는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다.

첫 번째로, 『아시아, 아시아』는 발전한 한국과 대비되는 주변부 국가의 빈곤, 경제발전의 ‘지체’를 강조하면서 이주노동자에 비해 우월한 한국인을 부각시키고 있다. 각 국의 빈곤한 모습을 묘사한 대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몽골: 열악한 자연환경, 기후로 경제발전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한국을 경제성장의 모델로 세워 매년 교류 증가(2004년 3월 15일 방송).
- (2) 필리핀: 한때 일본을 잇는 아시아 제2의 경제대국 그러나 전 인구의 10%인 부유층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90%, 90%인 빈곤층의 소득이 10%에 불과한 빈부격차로 경제발전이 어려움(2004년 3월 22일 방송).
- (3) 파키스탄: 인더스 강 유역에 관개농업으로 번영을 누렸던 이슬람의 나라 척박한 환경과 높은 문맹률로 현재 경제적 침체 상태. 한국기업이 대형건축 사업에 진출, 파키스탄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2004년 4월 5일 방송).
- (4) 인도: 10억 세계 2위 인구 조밀 국. 세계 최빈국의 하나. [카스트 제도와 빈민촌 화면을 부각하며: 인용자주] 5억이 넘는 빈곤층 미래가 없는 인도 빈민의 삶. 희망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올 수 밖에 없었던 라나(2004년 4월 26일 방송).
- (5) 스리랑카: 긴 식민지 역사 2300년 불교문화 열악한 기후조건에 따른 사회기반 시설의 미흡. 20년에 걸친 스리랑카의 내전(內戰)으로 국제자본은 투자를 기피하게 되었고 이는 경제발전이 악영향.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스리랑카 사람들(2004년 5월 17일 방송).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시아, 아시아』가 생산하는 주된 담론은 중심부(한국)와 주변부(아시아)의 ‘대바’를 통해 자국의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왔으며, 이들 주변부 국가의 미래는 ‘한국’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암묵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스리랑카 시리즈에서 이주 노동자 사랏 나아나난다 에드리상호와 그의 딸이 상봉한 뒤 서울 나들이를 하면서 깔린 자막인 “역경을 이겨내고 눈부시게 성장한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에 10년 후 딸이 만들어 갈 스리랑카의 미래가 있습니다”(2004년 5월 24일 방송)라든지 인도 이주노동자 라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온 가족들이 한국을 떠나는 모습을 비추면서, “30년 전 우리가 있었던 3D의 힘든 자리에 외국인 노동자가 있습니다. 코리아 드림, 절망이 아닌 희망이어야 합니다”(2004년 4월 26일 방송), “언젠가 이들이 한국에서 발견한 필리핀의 미래를 짊어지고 돌아 올 것”(2004년 3월 29일 방송) 등의 내용은 성공한 한민족에 대한 ‘자기 확산’을 강조하는 담론이었다<sup>18)</sup>

산업화 시기 한국인들은 ‘서구인=근대성·문명’으로 여겼으며 경제적 성장은 국가목표로 절대시되었다. 반면 비서구인은 전근대성이나 비효율성, 게으름, 경제적 빈곤을 상징했다.<sup>19)</sup> 이러한 이분법적 시각은 현재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어, 과거 한국의 ‘따라 잡기’(take-off)의 목표였던 근대화를 이제 이들은 한국을 ‘모델’로 삼아 근대화를 달성해야 하는 ‘전근대적인 대상’으로 고착된다.

두 번째로, 『아시아, 아시아』는 이주노동자들을 한국 노동자와 동등한 주체라기 보다, 온정과 수혜의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호명하고 있다. 물론 『아시아, 아시아』

18) 이런 담론은 『아시아, 아시아』 뿐만이 아니라 2000년을 즈음한 신문 사설들에서도 이주노동자 ‘보호론’의 형태로 등장했다. “외국인노동자, 좀 더 넓게는 비선진국 외국인에 대한 근거 없는 멸시와 혐오, 차별 등을 없애야 한다. 과거 우리도 남의 나라에서 고생했던 사실을 되새기는 차원이 아니라 선진국 대열에 근접한 문명국 국민으로서 그 같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는 이제 버릴 때도 됐다.” [사설] 외국인 노동자 근본대책을, 《국민일보》 2000년 5월 26일자 강조는 인용자.

19)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의 저작에는 한국 민족의 나태함, 도전정신, 군인정신의 결여가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다. 반면 독일, 일본의 근대화 성공 사례와 군사 쿠데타에 대한 옹호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지구촌, 1997); 박정희 『우리민족의 나아갈 길』(동아출판사, 1962) 참조

가 이주노동자들의 인간 이하의 노동조건에 대해 침묵했던 것은 아니다. 필리핀 이주노동자 쇼의 사연을 방송할 때는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욕설과 구타가 소개되며 이들의 ‘마음의 상처’와 ‘인간적인 대우’가 강조되었다(2004년 3월 22일 방송). 또한 파키스탄 이주노동자 무하마드 우스만 알렐(애칭: 보비)의 사연이 소개될 때는 한국인들의 “비인간적인 시선, 가장 큰 상처입니다”라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차별을 부각시키기도 했다(2004년 4월 5일 방송).

하지만 『아시아, 아시아』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소개하는 동시에 이들의 현실이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한국인의 도움이나 수혜(受惠)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으며, 이들이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 따뜻한 가족의 품에 안겨야 한다는 온정주의적 시선을 일관되게 유지한다. 실제로 『아시아, 아시아』에는 매 회마다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거나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개인과 지원단체가 등장한다. 종교단체 혹은 양심적인 사장(“외국인 노동자를 형제처럼 돌보는 따뜻한 사장님”, 2004년 4월 5일 방송),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사회보장을 강조하는 인도주의적 의사, 이주노동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해주고 따뜻하게 보살피 주는 목사님(2004년 5월 3일 방송), “잘 데리고 있다가 [고국으로: 인용자주] 보내겠다”고 가족들에게 약속하는 양심적인 고용주(2004년 5월 17일 방송) 등이 그들이다. 문제는 양심적 개인으로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인간적인 대우를 해온 이들이 아닌, 이주노동자 문제가 한국인의 온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아시아, 아시아』가 생산해내는 담론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둘러싼 ‘차별’ 담론을 살펴보자

### 3. 사회적 차별의 대상으로 이주노동

언론 지상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다.<sup>20)</sup> 이주노동자들이 피부로 감지하는 차별은 작업장에서 욕설, 폭행 및 일상에서 한국인들의 시선이다. 이런 차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보면 베트남산업기술연수생들에게 널리 퍼져있는 한국어교재에는 한국에서 인권을 호

20) 여기서 ‘차별’은 “한 사회 집단 혹은 윤리적 가치 등을 공유하는 하나의 개인을 이단(異端)으로 여기거나 나쁘게 취급하면서 다른 집단에서 분리시키는 것”을 뜻한다. 타하루 벤 켈룬 저/홍세화 (역), 『인종차별, 야만의 색깔들』(상형문자 2004), 28 쪽

소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sup>21)</sup>

또한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탄압은 동남아시아와 중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비화되기도 했으며, 네팔에서는 한국에서 일하다가 손과 발을 잃은 노동자의 사진을 담은 칼라 달력이 나오는가 하면,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인 개새끼’라는 팸플릿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네팔과 파키스탄에서는 관광 가이드가 한국인에게 일본인처럼 행세할 것을 충고한다고 알려졌다.<sup>22)</sup>

하지만 최근 보고에 따르면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배타적 감정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국가별 이민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결과, 외국인민자에 대한 태도가 가장 긍정적인 국가는 캐나다이고 가장 부정적인 국가는 헝가리, 불가리아 등 동구권 국가들이었다.

한국은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일본, 스웨덴, 독일 등과 더불어 24 개국 중 5위에 속했다. 하지만 한국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현실에서 호의적인 태도라기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아직 경험적으로 현실화되지 않은 추상적 이미지,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대중매체에 비쳐진 이미지를 내면화하는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sup>23)</sup> 따라서 실제 한국인들이 이민자내지 이주노동자와 만났을 때 반드시 이와 유사한 행동 양식을 보인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실제 작업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이주노동자와 맞닥 드리는 고용주의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구체적인 작업장 내부 담론을 차례로 살펴보자.

### 1) 작업장에서 차별 담론

첫 번째로, 작업장 내 차별을 둘러싼 담론을 살펴보자. 1960~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도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광범위하게 존재했다. 단적인 예로 작업장을 둘러싼 성별분업 담론, 여성노동을 미숙련 노동으로 간주하는 담론, 여성노동은 가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이라는 담론 등이 대표적이었다.<sup>24)</sup> 작

21)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백서』(다산글방 2001), 110 쪽

22) 최광범, 「조선족 희망과 분노」, 《국민일보》 2000년 3월 3일자, 유명기 앞의 논문(2002), 14 쪽

23) 설동훈, 앞의 책(2004).

24) 김원, 「여공의 정체성과 욕망: 1970년대 여공에 대한 지배적 담론의 비판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12집 1호(2004a), 60-74 쪽

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도 유사하게 한국인 노동자들에 비해 ‘낮은 지위·열등한 노동력’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시각을 정당화시키는 것으로는 우선 작업장 내 ‘인종적 위계질서’를 들 수 있다.<sup>25)</sup>

한국인 고용주와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못사는 것들’ 혹은 ‘더러운 인종’이라는 담론을 내면화함으로써 작업장 내 인종적 위계질서를 정당화한다. 이처럼 인종적 위계질서를 재생산하는 인종주의는 특정 집단의 ‘타자화 과정’을 통해 자신들과 타자가 ‘다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타자에 대한 차별은 개인적 특성에 기초한 것이 아닌 집단으로서 특징에 기초하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이다.<sup>26)</sup> 바로 인종적 위계질서는 피부색과 같은 생물학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해당 집단·개인이 속한 국가의 세계체제 내 지위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이다.<sup>27)</sup>

특히 인종적 위계질서를 정당화시키는 단일민족 신화는 자신과 다른 인종·국적의 집단을 열등한 존재로 간주하고, 이를 통해 혈통주의를 강조한다.<sup>28)</sup>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에서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 인종적 위계질서가 강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백인종·서유럽 계열과 비교해서, 동남아·아프리카 등의 국적·인종을 지닌 집단에 대해서만 인종적 위계질서가 강요된다. 이러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선은 한국의 민족 개념이 혈통적 요인만이 아닌, 국가와 국적, 경제력 등의 요소와 접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내

25) ‘인종주의(racism)’는 피부색이 다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다른 문화적 풍습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믿는 일련의 믿음의 체계이다. 과학으로서 인종주의는 19세기 현상이며, 생물학적 인종우월주의 담론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새롭게 등장한 인종주의는 몇 가지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1) 문화적 차이에 기초한 인종주의, (2) 자유주의와 계몽주의를 왜곡해서 적용하는 인종주의, (3) 민족주의 담론을 통해 자민족의 문화적 특이성, 정신적 특권, 태생(胎生)부터 부여받는 자격 등을 강조하며, 이를 결여한 제3세계 출신 집단은 자국의 시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인종주의 등이 그것이다. 타하루 벤 젤룬(著)·홍세화(역), 앞의 책 33쪽, 황혜성, 「인종주의」, 『서양의 지적전통 II』(지식산업사, 2002), 267, 274쪽; 박경태 「한국의 화교 차별 연구를 위한 인종주의 담론 분석」, 『통합과 배제의 사회정책과 담론』(함께 읽는 책 2003), 23~25쪽.

26) 박경태, 위의 논문, 12~15쪽.

27) 단적인 예로 같은 흑인이더라도 세계체제 내 중심부 국가—대표적으로 미국—의 국적을 가진 경우, 이들에 대한 태도는 달라진다.

28) ‘단일민족의식’은 ‘우라’라는 원초적 혈연 감정에 바탕을 둔 ‘동류의식(同類意識)’으로 기본적으로 정의(情誼)의 집단주의로서 내적으로 강한 정서적 동질성을 공유함을 통해 외부에 대해 강한 배타성을 지님을 속성으로 한다. 유명기, 앞의 논문(2002), 28쪽.

면화된 서구 승배와 혈연적 민족주의에 기반 한 인종주의의 이명(異名)’에 다름이 아니다.<sup>29)</sup>

이러한 인종적 위계질서는 임금, 노동시간, 인간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드러난다. 많은 이주 노동자들은 나이, 숙련 등과 무관하게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한국인의 ‘밑’에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이주노동자들은 작업장 위계질서의 ‘최하층’에 존재한다.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뿐만이 아니라, 한국인 상사나 동료가 시키는 일도 모두 해야 했으며, 작업장내 모든 한국인들은 ‘상사’로 규정되었다.<sup>30)</sup>

두 번째로, 작업장 폭력에 대해 살펴보면 이주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는 대부분 작업장은 이른바 3D산업에 속하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체들이다. 이들 영세사업장에 속한 한국인 노동자 역시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 하지만 유사한 노동 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노동자들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욕설 등은 재생산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작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관리자, 사장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만, 한국인 노동자로부터의 차별도 강하다고 답했다.<sup>31)</sup>

심지어 일부 공장에서는 공장 전담 관리 직원을 두고 이주노동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보고되고 있다.<sup>32)</sup> 경북 칠곡의 전자회사에서 일하는 방글라데시인

29) 한국인의 인종관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사회적 거리감을 적게 느끼는 민족·인종 집단은 1위에서 15위까지 대부분 백인계 서양인 집단이었다. 반면 필리핀, 네팔, 파키스탄 등 동남아시아 인종은 20~31위로 낮은 순위였다. 자세한 내용은 김규원, 「국제화시대와 한국의 대외인식」, 『성곡논총』, 제26집(1995) 참조. 하지만 이러한 인종적 위계질서는 최근에 발생한 현상이 아닌 ‘역사적 유산’이다. 개화기 이전 전근대 시기 한국인의 의식에는 유럽인(백인)과 비유럽인의 구분은 문제되지 않았다. 오히려 피부색과 무관하게 중국문명을 모른다는 이유로 오랑캐(夷)로 인식되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개화기 이후 사회진화론이 유입되면서 양상은 달라졌다. 서재필 등이 주도했던 《독립신문》에서 가장 열등한 인종으로 무시당했던 대상은 흑인이었으며, 백인종은 “오늘날 세계인종 중에서 제일 영민하고 부지런하고 담대한 고로 온 천하 각국에 모두 퍼져 차차 하등 인종들을 이기고 토지와 초목을 차지하는 고로, 하등 인종 중에 백인종과 섞여 백인종의 학문과 풍속을 배워 그 사람들과 같이 문명진보를 위해 차차 멸종이 되어야”한다고 숭상되었다. 박노자, 앞의 책, 273, 286~287쪽.

30) 한건수, 앞의 글, 168쪽, 설동훈·최홍엽·한건수, 앞의 책, 184, 264 쪽

31) 설동훈, 앞의 책(2004), 42 쪽

32) 민경의·현원섭·이주송, 「침중취재, 외국인 노동자」, MBC 뉴스테스크, 2004년 4월 3일.

리폰은 휴식 시간에 심부름을 시키려는 사장의 손짓에 기름이 묻은 장갑을 벗고 가려고 다소 주춤거리자 사장은 그에게 발길질을 해댔다. 폭력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말리던 한국인들도 사장에 합세해서 매일 리폰을 구타했고, 리폰이 너무 맞아서 허리를 다쳐 하루만 쉬게 해달라고 애원해도, 목덜미를 질질 잡아끌고 가 억지로 일을 시켰다. 그러나 어느 한국인 노동자도 나서서 말려주지 않았다.<sup>33)</sup> 하지만 작업장 폭력에 대한 한국 고용주의 담론을 보면, 기술을 배우러온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작업장 폭력을 ‘정당화 시키는 경우가 많다. 『경제풍월』에 실린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의 글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34)</sup>

현장에서 그들(이주노동자들: 인용자주) 지휘하고 지시하는 사람은 한국인으로, 때에 따라서 격한 언어가 사용될 수도 있고 답답한 마음에서 손이 갈 때도 있을 것이다. 기술을 배우러온 입장에서 병어리 3년이야 당연한 것을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의 위험이 있는 현장에서 거친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쯤은 그들도 잘 알고 있다.

과연 한국인 노동자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은 의사소통의 결핍에서 기인한 것일까, 아니라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서유럽 노동자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특정 사회에서 최하위 층에 위치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주변적 지위를 보상받기 위해 작업장 내에서 거친 말투, 행동 등을 보이고, 일상생활에서도 남성다움(masculinity)을 극도로 강조하는 문화적 패턴을 보인다.<sup>35)</sup>

산업화 시기 한국에서도 남성노동자들은 여성노동자들과 비슷한 노동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공돌이’라고 천시 받는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 빈번하게 여성노동자들에 대해 폭행, 욕설, 성폭력 등을 가했다.<sup>36)</sup> 이는 작업장 질서에

33) 이란주, 『말해요, 찬드라』(삶이 보이는 창, 2003), 107, 163쪽.

34) 위의 책, 104쪽에서 재인용.

35) 이러한 내면화된 차별구조는 유명기, 앞의 논문(1995), 167~168쪽에서 이미 해석된 바 있다. 유명기는 이러한 현상을 윌리스와 우에노 시즈코를 원용하며 ‘복합차별’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폴 윌리스(저)/김찬호(역), 『교육현장과 계급재생산』(민맥, 1989) 참조.

36) 김원, 앞의 논문(2003), 162~170쪽.

서 사회적 타자로 여성노동자들을 위치시키고, 상실된 자신의 자존심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과정은 다름 아닌 특정한 젠더·인종·국적을 지닌 노동자들에 대한 타자화를 정당화시키는 담론이었다.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3D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에게 공공연한 폭행을 가하는 것은 한국 사회 주변계급이자 타자인 자신들의 상실감을 회복하기 위한 ‘남성다움’의 과시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대상은 다르지만 이러한 타자화를 정당하기 위한 담론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고, 폭행을 가한 노동자와 관리자들은 인종적 위계질서와 남성성의 회복이 아닌, ‘일이 서툰 외국인 노동자들과 작업하다보니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이를 정당화시키곤 했다.

작업장에서 폭행뿐만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을 ‘미숙련·단순노동’이란 담론으로 계열화시키기도 했다. 이들 담론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인(否認)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 혹은 미등록 노동자이므로 제대로 된 노동권을 지닐 자격이 없는 사회적 타자임을 공공연하게 드러낸다. 작업장에서 폭행을 당한 동료에 대해 집단적으로 항의한 필리핀 연수생들에 대하여 한국인 감독자는 연수받으러 왔으면 돈을 내고 와야지 돈을 받으면서 무슨 데모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sup>37)</sup>

또한, “방글라데시 출신 알라우딘(37세)은 경기도 양주시의 도금공장에서 일했지만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해 지난달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퇴근 시간을 넘겨 일할 때도 많았지만 초과수당은 고사하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이다. 알라우딘씨는 “한국 아줌마들에게도 다 주면서 외국인만 안 준다며 푸념을 늘어놓았다. 그는 “공장 노동자들 사이에도 서열이 존재 한다”며 “한국인 관리자 한국인 남자, 한국인 여자, 외국인 노동자 순이다”라고 말했다.<sup>38)</sup>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한국인 고용주와 노동자들은 ‘가족으로서 회사’를 이주노동자들에게 강조한다. 실제로 고용주나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의 한국 적응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도산 기업의 영세성 등을 이유로 한

37) 유명기,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문화」, 『노동문제논집』, 13집(1997), 72~74쪽.

38) 선정수, 「바로 서는 한국사회 제6부: 빛나간 민족주의(1) 외국인근로자 차별」, 《국민일보》 2000년 5월 24일자.



국인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적립된 임금이나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주노동이 도입된 초기에는 소개업자로부터 1명당 5만원 내지 10만원씩 주고 노동자를 인수받은 뒤 몇 달이고 임금을 체불한 뒤 다른 사업주에게 돈을 받고 넘기는 속칭 “뽕뽕이 돌리개”가 성행하기도 했다<sup>39)</sup> 혹은 자신들이 지금은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서 체불된 임금을 주지 못하지만, 조만간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 이주노동자 본국에 직접 가서 주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한다. ‘아버지 같이 고용주를 생각하던 이주노동자들은 이런 약속을 철썩 같이 믿고 본국으로 떠나지만, 시간이 흘러도 연락은 없고 천신만고 끝에 고용주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걸면 ‘결번’(缺番) 신호음만이 반복된다<sup>40)</sup> 극단적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외화유출을 막은 애국적 행위”라고 주장하는 고용주조차 존재하는 실정이다.<sup>41)</sup>

나는 이런 현상을 회사라는 상상적 공동체 내 이주노동자의 ‘비가족화’라고 규정하고 싶다. 고용주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며, 회사를 가족과 같은 공동체라고 부른다. 이는 이주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관계를 계약관계가 아닌, 가부장으로 상징되는 고용주에 종속된 ‘부자(혹은 부녀) 관계’로 사유하려는 목적이 숨겨져 있다. 이 과정에서 고용주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자신이 가난한 나라에서 온 불쌍한 것들을 구제해주는 ‘은혜로운 아버지’로 비추어 지길 원했다.

그러나 가부장적인 가족아래에서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 자의적인 구타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용주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아버지’로 군림하기만을 원했다. 산업화 시기 여성노동자들에 대해 고용주는 ‘자비로운 아버지’로 비추어지길 원했지만, 여성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에 대해 자신들의 권리를 찾으려고 할 때, 그녀들은 ‘버려진 딸’처럼 취급되었다.

이처럼 산업화 시기 그리고 세계화 이후에 이르기까지 고용주들은 ‘가족공동체

39) 김희경, 「인권의 사각지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월간 말』, 1992년 8월호(1992), 177쪽.

40) 이외에도 고용주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고 단속기간을 이용해 이주노동자를 신고한 경우, 체불임금을 요구하자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경우 그리고 체불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의 거주지를 파악, 미등록노동자라고 신고한 경우 등이 있다. 자세한 사례는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앞의 책, 56-57쪽 참조.

41) 박무영, 「외국인 기술연수, 한국판 ‘뿌라’의 오명을 벗을 수 있나」, 『노동운동』 35 호(1995).

로서 회사를 상상적으로 구성하고자 했지만, 특정한 주변부 노동자를 작업장 질서의 ‘타자’로 재현함으로써 작업장내 위계질서를 재생산했다. 다만 산업화 시기에는 성별분업이란 담론이, 세계화 이후에는 인종적 위계질서가 타자를 구성하는 데 동원되었다는 점이 다를 뿐이었다.

## 2) 일상에서 차별 담론

두 번째로, 일상에서 차별을 둘러싼 담론을 살펴보자. ‘일상적 차별’의 경우 차별자 집단이 당연시하는 문화적 가치의 표현이므로 차별자 자신도 이것을 차별인지 인식하지 못할 때를 의미한다.<sup>42)</sup> 이 글에서 문제 삼는 것은 차별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차별을 정당화하는 담론들이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한국인들이 자신의 사유 속에서 구성한 이주노동자는 ‘상상적인 것’이다. 주변부 국가 출신의 유색인종에 대한 한국인의 시각은 ‘외국인혐오증’(Xenophobia)은 아닐지라도 ‘불결함’ ‘가까이하고 싶지 않음’이란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sup>43)</sup> 단적인 예로 한국과 상이한 이주노동자들의 문화, 식습관 등도 미개함, 야만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오른 손으로 식사하는 것에 대한 한국인들의 시각이 대표적이다.<sup>44)</sup>

한 중국동포 이주노동자의 경우 밤에 이들이 다소 시끄러웠다는 이유로 세를 든 주인과 송사(訟事)가 벌어졌는데, 집주인이 이를 중재하기 위해 온 인권운동가에게 한 이야기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시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준다.<sup>45)</sup>

주인이주머니는 ‘일방적으로 그쪽 편(이주노동자 지칭: 인용자주)만 드는 것이 잘하는 짓이야’ 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더니 결정적인 이야기를 했다.

---

42) 유명기, 앞의 논문(2002), 16 쪽

43) 이방인, 외국인에 대한 혐오, 기피증을 지칭하는 제노포비아는 한국 사회에서 ‘다른 존재’의 대상이 누구—백인이나 흑인(혹은 유색인)—이냐에 따라, 한편으로는 경계의 심리가 거칠고 비열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다른 한편 경외의 심리가 비굴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특징을 지녔다. 타하루 벤 켈문(저)/홍세화(역), 앞의 책, 21 쪽

44) 유명기, 앞의 논문(1995), 156 쪽

45) 이란주, 앞의 책, 53~54쪽.

“나는 당신이 말하면서 자꾸 그 사람들이랑 우리를 똑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 아주 불쾌해”  
“사람이 다 똑같은 거지, 같고 다르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왜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당신이 주인 같으면 주겠나. 세 들어 사는 것들이. 아, 그것도 중국에서 그냥 와서 있는 것들이 말야... 그런데 그것들이(이주노동자들이: 인용자주) 와서 빌면 되지, 거기가 어디여, 상담소까지 찾아가서 지랄이여.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들의 시선이다. 한국인들은 이주노동자들의 피부색, 음식물, 체격, 언어 등을 ‘차이’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깨끗이 정화되어 없애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를 오염시키는 위험한 존재—여기서 ‘오염’(汚染, contamination)은 실제 질병에서 사회병리적 원인까지 모두를 포괄한다—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위생학’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특히 길거리나 버스, 지하철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신기한 듯이 쳐다보는 것은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일상적 차별이다. 말리 출신의 28 세 남성 이주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한국 사람들이 피해요. 옆에 자리가 있어도 한국 사람들 안 앉아요..버스 기사가 “내려” 그랬어요. 어떤 버스 기사는 차를 못 타게 해요. 냄새난다고 못 타게 해요. 어떤 버스 기사는 자기 뒷자리에 앉으면 다른 자리로 가래요. 냄새난다고 어떤 버스 기사는 향수 같은 거 나한테 뿌렸어요.46)

이들 담론들은 에이즈(AIDS), 사스(Sars) 등 전염성질병의 병원지(病源地)로 이주노동자들을 지목하기도 했다. 2004년 5월 4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구제역의 감염경로를 추적하면서 중국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한 농사를 보도하며, 중

---

46) 설동훈·최홍엽·한건수, 앞의 책, 181쪽.

국교포에 의해 감염이 확산되었을 가능성을 은연중에 흘린다. 또한 성동외국인상담실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센터 앞 도로에서 ‘에이즈 감염 구역’이라는 낙서를 보았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했다. 아침에 출근해보니 전날까지도 없었던 낙서가 붉은색 페인트로 도로를 뒤덮고 있었던 것. 행여 누가 볼까봐 재빨리 낙서를 지우긴 했지만 그날의 충격은 아직까지 잊을 수 없다”고 한다.<sup>47)</sup> 2003년 9월 미아리 매매촌 지역에서도 사스와 에이즈의 온상이라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외국인 출입금지를 결의하기도 했는데 기사 중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은 일절 받지 않습니다(Foreigner off-limits place).” 1960년대 이후 서울 시내 ‘윤락 1번지’로 인식돼온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이 최근 매출이 급감하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출입을 금지 한다는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어 화제다...윤락업소들이 외국인 ‘사찰’에 나선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3개월에 1차례씩 시행되는 경찰의 일제 단속에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아지트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SARS(중증급성호흡기질환)와 AIDS 감염의 온상’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기 때문 이 같은 나쁜 이미지로 인해 윤락촌 전체 매출이 50% 이상 급감했으며, 일부 대형업소를 제외하고는 업소마다 하루 평균 매출이 20~30만원에 그치고 있다고 업소들은 하소연하고 있다.<sup>48)</sup>

이주노동자를 위생학의 대상으로 여기는 담론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병리라는 의미의 ‘범죄자’로 정당화시키는 담론도 상당수 발견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의 급증에 따라 여러 신문 지상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등록노동자라는 불안정한 지위, 생활고, 한국인의 차별 등으로 이들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계급 양분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이후 한국 사회 범죄가 양적으로 증가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가 피해자인 사건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로 몰린 경험이 응답자의 44.2%였다.’<sup>49)</sup>

47) 선정수, 앞의 글

48) 이윤, 「윤락가 ‘외국인 노동자 출입금지’ 논란’ 미아리 텍사스 매출급감에 자체 결의」, 《연합뉴스》 2003년 9월 16일자.

문제는 이주노동에 대한 담론이 ‘예비범죄자’로서 이주노동자를 ‘일반화’한다는 점이다. 사회병리, 위생학의 차원뿐만이 아니라 2002년 아모르 파업 당시 작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회사가 버린 비품을 농성장에 가져다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 상무는, “이거는 또 뭐야, 이거(옷장을 지참: 인용자주) 여기 놓지 말라고 내가 몇 번 말했어. 영? 당장 밖으로 옮기지 못해 왜 회사 물건을 니네들이 아무데나 옮겨 놓고 그래? 이 도둑놈 새끼들”라고 호통을 친다. 산업화 시기 고용주들은 제조업 여성노동자들도 ‘검신’(檢身, 몸수색)을 통해 매일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몸수색’이야말로 여성노동자들의 여성성이 훼손되는 동시에 계급 사이의 차별이 일상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sup>50)</sup> 산업화 시기 여성노동자들은 여성이자 가난한 농촌 출신 주변계급이란 이유로,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다른 피부색 가난한 주변부 국가 출신의 ‘위험한 유전자’를 가진 존재라는 이유로 ‘범죄자’로 여겨진다.

이들 담론들은 이주노동자의 존재 자체가 사회질서 혼란의 근원적인 원인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불만에 가득 찬 예비범죄자’라는 담론을 형성했다. 언론은 임금체불과 폭행, 거액의 송출 비용에 따른 부채 누적에 시달린 이주노동자들이 공공연히 ‘분풀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단정하며, 그 실례로 외국인 범죄가 5년간 2.7배 증가한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외국인의 급증에 비한 외국인 범죄 수사 인력의 제자리걸음’, ‘불법 체류자 관리를 소홀히 하면 외국인 범죄 등 문제가 커지며, 일정 단계를 지나면 외국인 거주 지역이 슬럼화 되어 마약 밀매, 총기 밀반입 등이 일상화될 수 있다’ 등으로 보도했다.<sup>51)</sup> 이상의 담론들은 ‘외국인 조직폭력=이주노동자’란 전제 하에 이들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할 가능성이 높은 ‘예비 범죄자’들이며, ‘전염성 질병’에 버금가는 사회문제라는 진단을

49) 설동훈·최홍엽·한건수, 앞의 책, 180쪽.

50) 김원, 앞의 논문(2004a), 51쪽.

51) 자세한 기사 내용은 윤창수, 「외국인노동자 300만 여명 내년 초 강제 출국 3D 인력대란·역풍 우려」, 《대한매일》 2002년 10월 16일자; 안승섭, 「외국인 범죄 급증, 대책 마련 시급」, 《연합뉴스》 2004년 7월 19일자; 박동주, 「급증하는 외국인범죄, 대책 시급」, 《데이터뉴스》 2004년 7월 19일자; 문갑식,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성공하려면」, 《조선일보》 2004년 8월 19일자; 조선일보 특별취재팀, 「활개치는 외국인 조폭」, 《조선일보》 2003년 4월 28일·5월 3일 등을 참조.

내린다.

이렇게 이주노동자를 ‘범죄자’ 혹은 ‘한국인의 일자리를 침식 한다는 식의 담론이 극단화되는 경우 각종 인터넷에 반외국인—특히 이주노동자—게시물이 등장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빼앗아간 일자리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린 영세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40~50명씩 자살하고 있다,” “어떤 한국 여성은 파키스탄 사람과 결혼한 뒤 파키스탄으로 가서 인신매매돼 결국 정신병에 걸려 그곳 공항을 떠돌고 있다,” “특수부대원들한테 출입국관리소 직원용 옷을 입혀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자,” “구청이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에 세금을 지원해야 할 명분이 없는데도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편향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sup>52)</sup>

중소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의 한 연구원도 노골적으로 “조선족들이 한국에 자유롭게 들어오면 노동시장은 난리가 난다. 지금도 조선족들은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 식당에서 일자리를 뺏기고 유흥업소에 취업한 주부, 저임금 노동자를 선호하는 하는 기업주 탓에 밀려난 한국인 노동자를 생각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는 엄격히 단속해 모두 추방해야 한다”고 말한다.<sup>53)</sup>

이런 담론은 결코 최근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국 사회는 산업화 시기부터 사회적 주변계급을 ‘예비범죄자’로 간주하는 담론을 유통시킴으로써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켰다. 특히 당시 주변계급 가운데 다수를 차지했던 여성노동자의 욕망을 ‘도덕 담론’을 통해 통제하고자 했고 이로부터 벗어난 여성노동자들을 ‘요보호여성’이라는 예비범죄자로 규정했다. 단적인 예로, ‘개안 이자’ 여성으로서 여성노동자의 욕망, 특히 성적인 욕망 등은 비도덕적이고 수치스러운 것이며, 건강한 재생산과 가족에 헌신적인 모성 상에 위배된다고 사고했다. 바로 가족의 보호로부터 벗어난 여성들은 언제든지 사회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담론을 유포시켰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식모, 여성노동자, 매매춘 여성들을 ‘요보호여성’으로 규정한 국가 담론이었다.<sup>54)</sup>

52) 선정수, 앞의 글

53) 송홍근, 「중국 조선족 15만 노동시장 교란이나 3D 업종 해결사냐, 『신동아』 45 호(2002).

54) 김원, 「근대화 시기 주변부 여성노동에 대한 담론 식모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3집 1호(2004b), 195~199 쪽

이는 세계화 시기에는 이주노동과 관련, 이주노동자와의 성관계내지 결혼은 민족의 순수혈통을 더럽히고, 더 나아가 가족과 사회를 오염시킨다는 ‘사회적 병리 현상’이란 담론으로 반복되어 나타난다. 한 출입국 업무 관련 공무원의 말을 들어 보자.<sup>55)</sup>

중동 사람들 신체조건 때문에 한국 여자들이 빠져 들면 헤어지지 못해요. 혼혈아들이 본국으로 가지도 못해요. [한국 여성과 혼인한 외국인 노동자중] 중혼(重婚)도 많지요. 싱글인 상태에서 우리 집 딸들을 데려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가나 사람들이 **질이 안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후손을 낳으면 갈 길이 뻥해요.

강조한 부분을 보면, 확인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성적 능력’을 강조하면서, 이주노동자와의 결혼을 남성성의 극대화로 말미암은 ‘비정상·비표준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처럼 정상적이지 않은 인종인 이주노동자들은 ‘질이 좋지 않은 존재’로 여겨지며, 그 근거로 ‘중혼’ 등 특정 국가의 사회문화적 제도가 지적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구절은 “우리 집 딸들”이란 부분이다. 이주노동을 타자·비정상적인 대상으로 간주하기 위해, 자신과 무관한 여성들을 ‘우리 집 딸들’이라고 규정한다. 이주노동자들과 결혼하는 상당수 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주변부에 속한 여성노동자들이 대다수 일 것이다. 과연 이들이 주변부여성들에 대해 제대로 된 시선을 준 일이 존재했을까? 마치 산업화 시기 국가와 고용주들이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여성노동자들을 착취하다가, 회사가 어려울 때 “우리 애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sup>56)</sup> 이런 담론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오염된 유전인자’가 안정된 가족·사회질서를 더럽힌다는 것을 정당화시켰던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마리아 토레스의 경우 아내 친구들의 이주노동자인 자신에 대한 호기심어린 시선 때문에 고통스러워했고, 심지어 아내의 가족들은 은근히 헤어질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그의 수기 가운데 일부를 보

55) 여기서 재인용한 공무원의 사례는 극단적인 경우일 것이다. 하지만 공공연하게 이런 담론이 언급되지는 못하지만, 한국인의 무의식적인 내면세계 안에 이런 외국인에 대한 시각이 부재하다고 볼 수도 없다. 한진수, 앞의 논문, 172쪽에서 재인용(강조는 인용자).

56) 김원, 앞의 논문(2003), 179~184 쪽

면 다음과 같다. “가족들도 하필이면 일본 사람도 아니고 피부가 까만 사람이냐며, 국적과 피부색에 대한 편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우리의 결합을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으로 보는 친구들과 가족들의 우려 반 호기심 반섞인 관심은 우리 부부를 힘들게 했다. 은근히 허어질 것을 기대하는 말투에 질린 아내는 고향 친구들과도 연락도 뜸하게 하더니 지금은 거의 연락하는 친구가 없다.”<sup>57)</sup> 이러한 시각은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존재는 ‘일시적’이어야 하며, 이들의 항구적인 거주는 민족의 도덕적 기반을 전복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한국인 그리고 그 가족이란 차원에서 적용됨을 알 수 있다.<sup>58)</sup>

### III. 소결

이 글을 통해 한국 사회 이주노동자들을 둘러싼 담론들을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확인했듯이 이주노동에 대한 담론들을 이주 노동을 ‘국민·시민 혹은 ‘한국인 노동자와 동등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타자·소수자로 만들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자계급을 소수자로 만들어내며, 그 가운데에서 여성 이주민 비정규 고용자들은 주변적 노동자(under-class)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처럼 자본은 노동자계급을 시민, 지역민, 국내·이주노동자 등으로 분할지배 하면서 통합된 노동자계급으로서 정체성을 약화시킨다. 특히 이런 과정을 통해 노동자들은 ‘보장된 노동자’와 ‘비보장된 노동자’로 구분된다.<sup>59)</sup> 전자는 노조나 다른 제도적 기제를 통해 국가장치 내부에 통합되는데 비해, 소수자가 주축을 이루는 비보장·주변부 노동자들은 이로부터 배제된다. 세계화 이후 한국 사회 비정규직·여성·이주노동자들이 바로 비보장노동자들이다.

이 글에서 살핀 이주 노동자를 둘러싼 담론의 목적, 논리 그리고 모순들을 보면

57) 마리오 토레스, 「아내와 딸에게 멋진 남편이 되고 싶다」, 『당대비평』 18호(2002), 77쪽

58) 케빈 그레이, 앞의 논문, 107쪽. 안전망으로서 이주노동자들의 동거와 이 내부에 관찰되는 가부장제에 대해서는 이금연, 「여성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그리고 차별」, 『당대비평』 18호(2002), 46~48쪽 참조

59) 윤수중, 「우리는 모두 소수자다」, 『다르게 사는 사람들 우리 사회 소수자들 이야기』(이학사 2002), 15쪽



먼저 이주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보는 간주하는 담론은 이주노동자들을 발전한 한국(인)에 대비되는 ‘타자’로 위치시킴으로써 산업화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상실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 하에 만들어 졌다 이들 담론은 이주노동자들은 난민, 혹은 ‘가난·미개·열등’하며, ‘권리와 시민권의 담지자’가 아닌 근대화를 성취한 한국을 쫓아가야하는 ‘수동적인 희생자’라는 논리를 내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부 국가의 가난한 민중이란 지배적 담론의 가정과 달리 이주노동자들에게 ‘이주’라는 선택은 국가·가족을 위한 희생양으로서가 아닌 적극적인 선택이란 내재적 모순을 안고 있다.

다음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수혜’의 대상으로 호명하는 담론의 목적은 한국인들은 현재 경제적 성공을 스스로 확인하려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한국인과 이주노동자간의 ‘차별’과 ‘위계질서’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목적도 내재해 있다. 이런 목적을 정당하기 위한 자기 충족적 논리로는 중심부(혹은 반주변부)로 상승한 한국이 아시아 주변부 국가들을 돌보아야한다는 논리, ‘성공한 근대화의 사례’로 코리안 드림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논리 등이 제시된다 또한 이러한 담론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담론’으로 확대되어 이주노동자를 자율적이고 평등한 주체가 아닌, 종교단체나 지원단체의 청원 대리투쟁 등에 의해 움직이는 대상으로 주체화시키고자 한다.

끝으로, 사회적 차별의 대상으로 이주노동자를 주체화하는 담론은 작업장과 일상생활에서 ‘인종적 위계질서’를 고착화시키고,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우연적’ 혹은 ‘문화 차이’로 인한 현상으로 자연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들을 시민권의 담지자인 자율적 주체가 아닌, 한국 사회의 타자—사회적 병리, 예비범죄자 등—로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일민족신화, 혈통주의, 위생학 등의 이데올로기(혹은 그 장치)가 작동했다.<sup>60)</sup>

끝으로, 본 연구는 1차적인 조사에 근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지닌 연구이다. 또한 이주노동자를 다룬 기존 연구들에 대해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주노동자 담론을 분석한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사회

60) 본 연구의 한계 가운데 하나는 이주여성이라는 범주에 대해 거의 천착하지 못한 점이다. ‘가부장제’, ‘성폭력’ 등에 노출된 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는 세계화 이후 대표적인 주변부 노동으로 가시화된 여성노동과 이주노동의 결합이란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을 둘러싼 담론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추출하지 못한 점도 이 글이 지닌 한계라고 생각한다. 이 점들은 이후 좀 더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닌 의미는 한국사회에서 한국인들에 의해 통용되는 담론을 분석대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수기·보고서, 이주노동을 사건으로 다룬 언론 매체의 보도, 이주 노동자지원 단체의 실태 보고서 그리고 언론·방송매체에서 이주노동을 다룬 보도물 등 제2차 자료가 지닌 유용성을 가능한 부각시킨 점이라고 지적하고 싶다.<sup>61)</sup>

### 참고문헌

김규원, 「국제화시대와 한국의 대외인식」. 『성공논총』 제26집, 1995.

김연희, 「외국인 노동자와 눈물 함께 나눠 행복: 윤정수씨」. 《문화일보》 2003년 5월 7일자.

김원, 「1970년대 민주노조와 교회단체」. 『산업노동연구』 제10집 1호, 2004.

김원, 「근대화 시기 주변부 여성노동에 대한 담론 식모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3집 1호, 2004.

김원, 「여공담론의 남성주의 비판: 전전 일본 여공에 비추어 본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

61) 결론을 빌어 심사자가 문제제기했던 문제에 대해 간략히 해명하고자 한다. 먼저 이 글의 논의 전개와 분석 단계에서 기존 연구들이 이미 분석한 내용을 필자의 독특한 주장인 것처럼 서술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그러한지 지적되어 있지 않아서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으나, 수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수정하고자 노력했음을 밝힌다. 그러나 과연 이 글에서 분석된 내용이 기존 연구에서 심층적으로 분석된 것의 반복인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1차 자료들에 근거한 연구들의 중요성을 충분히 필자도 인정하지만, 과연 기존 연구들이 텍스트로서 이주노동자들을 다룬 방송, 신문기사, 수기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 또한 이미 본문에서 밝힌 대로 일차적인 조사 자료가 제시되어야 논문의 독창성과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서도 필자는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1차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만이 독창적이며 연구로서 가치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물론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사료로서 가치를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는 그간 1차 자료들이 심각하게 다루지 않던 이주노동을 사건으로 다룬 언론 매체의 보도, 이주 노동자지원 단체의 실태 보고서등 2차 자료들을 텍스트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가 지닌 ‘빈 공간’을 보완했다고 생각한다. 동일한 혹은 이미 생산된 텍스트나 사료를 보더라도 그 해석은 충분히 다를 수 있으며, 담론 연구가 지니는 의미 가운데 한 가지는 지배적인 해석의 균열, 삭제된 맥락 등을 찾아내 분석하는 것이라고 본다.

-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3.
- 김원, 「여공의 정체성과 욕망: 1970년대 여공에 대한 지배적 담론의 비판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12집 1호, 2004.
- 김현미,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의 노동권」. 『한국여성학』 제16집, 2000.
- 김희경, 「인권의 사각지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월간 말』 1992년 8월호, 1992.
- 마리오 토레스, 「아내와 딸에게 떳떳한 가장이고 싶다」. 『당대비평』 18호, 2002.
- 문갑식,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성공하려면」. 《조선일보》 2004년 8월 19일자
- 민경의·현원섭·이주승, 「심층취재, 외국인 노동자」. MBC 뉴스데스크, 2004년 4월 3일
- 박경태, 「노동력 송출국에서 본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연결망 필리핀 가족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신학사상』 2001년 여름호, 2001.
- 박경태, 「한국의 화교 차별 연구를 위한 인종주의 담론 분석」 『통합과 배제의 사회정책과 담론』 서울: 함께 읽는 책, 2003.
- 박노자, 『당신들의 대한민국』. 서울: 한겨레신문사, 2001.
- 박동주, 「급증하는 외국인범죄, 대책 시급!」. 《데이터뉴스》 2004년 7월 19일자.
- 박무영, 「외국인 기술연수, 한국판 ‘뿌리’의 오명을 벗을 수 있다」. 『노동운동』 35호, 1995.
-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 서울: 지구촌, 1997.
- 박정희, 『우리민족의 나아갈 길』. 서울: 동아출판사, 1962.
- 선정수, 「바로 서는 한국사회 제6부 빛나간 민족주의(1) 외국인근로자 차별」 《국민일보》 2000년 5월 24일자
- 설동훈, 「한국의 외국인 노동운동, 1993~2003년」. 『진보평론』 17호, 2004.
- 설동훈, 「한국의 외국인노동자운동, 1993~2004년」.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서울: 한울 2004.
- 설동훈, 「한국의 이주노동자 운동」. 『우리시대의 소수자운동』. 서울: 이학사, 2005.
- 설동훈, 『국내 외국인노동자 차별해소방안 연구』. 서울: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4.
-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 설동훈·김현미·한건수·고현웅·셀리아,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서울: 여성부, 2003.
- 설동훈·김현미·한건수·고현웅·셀리아, 『외국인 여성엔터테이너의 일과 삶』. 서울: 한국사회학회, 2003.
- 설동훈·최홍엽·한건수,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2.
- 송홍근, 「중국 조선족 15만: 노동시장 교란이나 3D업종 해결사냐」. 『신동아』 45호, 2002.
- 안승섭, 「외국인 범죄 급증, 대책 마련 시급」. 《연합뉴스》 2004년 7월 19일자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백서』, 서울 다산글방 2001.
- 유명기, 「외국인 노동자, 아직 미완성인 우리의 미래」, 『당대비평』 18 호, 2002.
- 유명기,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문화」, 『노동문제논집』 13집, 1997.
- 유명기, 「제한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27집, 1995.
- 윤수중, 「우리는 모두 소수자다」, 『다르게 사는 사람들 우리 사회 소수자들 이야기』, 서울 이학사 2002.
- 윤창수, 「외국인노동자 300만 여명 내년 초 강제 출국 3D 인력대란 ‘역풍 우려」, 《대한매일》 2002년 10월 16일자.
- 이금연, 「여성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그리고 차별」, 『당대비평』 18 호, 2002.
- 이란주, 『말해요, 찬드라』, 서울 삶이 보이는 창 2003.
- 이옥정, 「국내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생활실태와 적응 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대 인류학과 대학원 석사논문, 1994.
- 이을, 「윤락가 ‘외국인 노동자 출입금지’ 논란’ 미아리 텍사스 매출급감에 자체 결의」, 《연합뉴스》 2003년 9월 16일자.
- 조선일보 특별취재팀, 「활개치는 외국인 조폭」, 《조선일보》 2003년 4월 28일~5월 3일자.
- 최광범, 「조선족 희망과 분노」, 《국민일보》 2000년 3월 3일자
- 최진영, 「국내 거주 이주여성의 삶 들여다보기, 내가보기」, 미발표 논문
- 케빈 그레이,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서 한국의 이주노동자들」, 『아세아연구』 제47권 2호, 2004.
- 폴 윌리스(저)/김찬호(역), 『교육현장과 계급재생산』, 서울: 민백, 1989.
- 한건수, 「‘타자 만들기’: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재현」, 『비교문화연구』 제9집 2호, 2004.
- 함한희,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따른 인종과 계급문제」, 『한국문화인류학』 제28 집, 1995.
- 황혜성, 「인종주의」, 『서양의 지적전통 II』, 서울: 지식산업사 2002.

● 투고일 : 2005. 4. 19.

● 심사완료일 : 2005. 5. 25.

● 주제어(keyword) : 이주노동(immigrant labor), 담론(discourse), 인종(race), 국적(nationality), 차별(discrimination)